

데스크칼럼

김인수

사회부장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다.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의 인구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교육의 균형이 가장 시급하다.

지방에 ‘서울대급 국립대학 10개’를 육성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는 단순히 명문대 숫자를 늘리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지방 청년들이 고향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대학 지원을 거점국립대인 전남대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지방대학 육성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연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기

광주·전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때문이다. 지역 혁신의 구심점이 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중·소 지방대학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쇠퇴한 지방의 부동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가격은 더 치솟았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인구와 일자리 부족으로 수요가 줄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근본적인 해법은 인구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다. 수도권에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늘리기보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에 맞는 주거·교육·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이 돌아온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그 핵심이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노력을 통해 산업·연구·교육이 결합된 국내 대표 ‘AI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준비된 인프라와 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총출발 AI 인재양성 사다리로 산업 기반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세계 혜택과 맞춤형 지원이 더해진다면 광주는 AI 기반의 미래 산업 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광주는 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꽃등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라는 역사적 자산에 더해 인공지능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과 결합한다면, 광주는 연구가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이라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최근 ‘청년 정책평가 전국 1위’, ‘글로벌대학 선정’이라는 소득을 얻은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성과가 균형발전의 실마리를 찾는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정책의 최적지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애플과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RE100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글로벌 투자처로 각광받는다.

전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과 바다·들판 등 다양한 입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제조업·연구개발·서비스 산업을 연계한다면, 전남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1단계 이전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주요 기관의 대다수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전한 기관들도 지역과의 연계가 약해 혁신도시는 행정기관 단지에 머물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문화, 연구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긴밀히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일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의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쇠퇴한, 아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주와 전남을 되살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자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기고

한춘옥

전남도의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일까?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한 밥상 뒤에는 이른 새벽 출근해 뜨거운 불 앞에서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땀과 정성이 배어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은 소중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섬·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지역별로 조리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식수인원의 편차가 크다. 단편적으로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의 평균은 63.5명이나, 대규모 학교에서는 1인당 100~130여명에 이른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의 조리 인원 기준이 50~7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다.

반복되는 과중한 노동은 곧 건강 문제로 드러난다. 급식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손가락 변형, 폐질환 등으로 병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전라남도교육청이 실시한 폐암 추적검진에서는 검사자의 90%가량이 이상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

소견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관리 부족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직업병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남도교육청 현업 업무 종사자들에게서 발생한 산재의 대다수가 급식 종사자들에게 발생했으며, 산재 유형 또한 넘어짐, 화상, 절단 등 급식실 특유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조리실무사에게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현장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식 종사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인력이 업무를 대신한다. 그러나 대체 인력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 단 위에는 2명, 군 단위에는 1명에 불과한 대체 인력으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결국 남은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고, 이는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여기에도 휴게실과 같은 기본적인 근무 환경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학교가 대다수다. 오래된 학교는 물론, 신설 학교조차 설계 단계에서부터 종사자의 휴게 공간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예산 문제를 넘어 인원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단면이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아이들에 건강과 학부모의 신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

심 영역으로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임금 몇 푼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안전망을 지키고 아이들에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노동자가 존중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이들 밥이니 참고 견디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대규모 학교에 집중된 과도한 노동을 분산시키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급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학교의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휴게 공간과 위생 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처리 지원과 자동화 설비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어 아이들의 급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로, 건강한 전일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길 진심을 담아 바라는 이유다.

사설

전남 서남권 AI전용데이터센터 기대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그룹이 전남 서남권에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했다고 한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최근 만남을 갖고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SK그룹이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전 세계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챗GPT 개발사로 알려진 오픈AI와 SK그룹이 전남에 짓기로한 AI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약 GPU 1만개로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서 GPU 1만개는 AI·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에서 대규모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반도체 집합으로 초거대 언어모델 학습, 대규모 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등 첨단 AI 프로젝트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AI 혁신과 국가 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AI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전략기술 투자 등에서 상징적 규모를 일컫는데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아직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입지와 착공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도시 ‘솔라시도’ 등이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데이터 센터 입지에 필요한 98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냉각수도 풍부해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서남권에 AI 전용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재생에너지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AI 인프라 조성과 지역 기반 AI 혁신을 강화키로 한데다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후보지로 전남도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번 발표를 ‘역대급 쾌거’로 규정하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 바이오 등과의 융복합 전략을 병행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서둘러야

전남 지역에 벼깨씨무늬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양분 부족 등으로 병의 외, 줄기 등에 흑갈색의 깨씨같은 무늬가 생기는 병을 말하는데 쌀 찰음 비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쌀 수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한다. 농가 소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인 것이다.

최근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벼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1만295ha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2.8배, 평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전남 벼 재배면적 14만2402ha의 7.2%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 기간 관련 재해보험 접수건수도 6529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16일 기준 충남 7000ha, 경북 4700ha, 전북 1200ha 등 전국 2만9700ha에서 이같은 피해가 잠정 집계되고 있다.

올해 이 병이 유독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부터 지속된 이상 고온현상과 집중호우의 여파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어느해 보다 심한 이상 가후로 인해 양분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곰팡이성 병해인 이 병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달 들어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시군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병이 단순한 병해의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찾아 벼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조사 뒤 복구비 지원, 깨씨무늬병 피해 벼 전량 매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도 ‘농업재난재해’ 인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달중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벼 수확이 한창이라 이 시기를 놓쳐 벼를 수확하고 나면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속히 이 병을 농업재해로 인정, 농심이 타들어 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060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 무 국	370-7093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